

금남로에서

정재현



요즘 안방극장은 조선시대 성군(聖君)의 일대기를 그린 사극 열풍이 거세다. '이산'과 '대왕 세종'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두 드라마는 각각 30%대와 20%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성군을 주제로 한 TV 사극의 인기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갈망을 반영한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둔 민심의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민심이 '이산'과 '대왕 세종'에서 바라는 지도자의 리더십은 무엇일까.

'탕탕평평실'의 교훈

세종대왕은 조선조 역대 왕 가운데 최고의 '창조적 CEO'로 불린다. 세종의 창조적 경영은 출신을 가리지 않은 인재 발탁에서 시작됐다. 세계 최초의 물시계인 '자극부(自擊漏)'를 발명한 장영실도 대표적인 예다. 장영실은 기녀의 소생으로 관노(官奴) 출신이다. 하지만, 세종은 노예의 신분인 그를 과감히 발탁했다. 당시 노비를 관직에 발탁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파격이다. 세종은 출신을 불문한 인재 발탁을 통해 민족문화의 창달과 조선 왕조의 기틀을 튼튼히 한 것이다.

조선조 22대 국왕인 이산 정조는 조선조 르네상스를 활짝 꽃 피운 성군이다. 정

지역 편중인사 유감이다

조는 '탕평(蕩平)'이라는 통치 철학으로 민생 안정과 문예 부흥의 시대를 열었다. 실제로 정조는 '특별히 탕탕평평실(蕩蕩平平實)'이라는 편역을 맡고 아침 저녁으로 눈여겨보면서 나의 끝없는 교훈으로 삼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탕평은 임금의 정치가 한쪽을 편들지 않고 사심이 없으며, 당을 이루지도 않은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이나 정조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인사를 통해 강력한 왕권을 형성했고 이를 통해 민생 안정과 문예 부흥을 이룩한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상사이다. 이는 한 나라나 조직의 흥망은 사람 쓰기에 달

려있다는 말이다. 또 사람을 다루는 인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함의도 있다. 인사가 망사(亡事)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 당선인은 이번 인사를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자랑했다. 각 분야에 최고 중의 최고의 인재를 발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 대한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특정 지역과 학맥에 편중된 인사라는 것이다. 수석비서관과 대변인 등 8명을 서울과 영남 출신이 짝을

이했다. 서울대 4명, 고려대 2명 등 특정 학교에 편중됐다. 역대 정권 가운데 이렇게 '편중인사'를 한 적은 없다.

이 당선인 측은 수석비서관 인사가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비등하자 내각 인선은 출신과 성향 등을 감안한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적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힘의 추는 청와대 쪽에 기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설사 내각 인사에서 탕평이 어느 정도 이뤄진다고 해도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인사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의 성패 여부는 인사에 달렸다. 편중 인사, 가신 인

사, 코드 인사 등 실패한 인사 정책은 실패한 지도자를 낳고, 균형 인사, 능력 인사, 포용 인사 등 성공한 인사 정책은 성공한 지도자를 만든다. '인사'가 지도자의 통치술 1호로 꼽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정 성패 인사에 달려

새 정부의 편중 인사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의 비판은 '호남 흠레'라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게 결코 아니다. 이 같은 시각은 지역민의 자존심을 깔아 뭉개는 처사다. 호남인은 과거 경험에서 균형 인사만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민 통합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망국병으로 불리는 '지역 불균형'은 지난 군사정권 시절 편중 인사가 낳은 똥물 병이다. 그런데 또다시 편중인사로 지역 간, 계층 간 편을 갈라서야 되겠는가. 실패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세종과 정조가 성군으로 추앙받는 것은 초심을 잃지 않은 개혁정신에 있다. 그 개혁의 첫 단추는 인사다. 우리 사회의 지역·계층·이념의 단층선을 허물지 않고서 진정한 개혁과 균형 발전은 이뤄질 수 없다. 새 대통령은 '탕탕평평실'을 끝없는 교훈으로 삼아 온 정조의 개혁 정신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jhjung@kwangju.co.kr

시설

송레문 방화 동기가 '토지보상 불만'이라니

송레문 방화사건이 한 개인의 비뚤어진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개인의 불만 때문에 600년을 이어온 '국보 1호'가 잿더미로 사라지고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범행 동기가 아닐 수 없다.

송레문 방화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검거된 채보(70)씨는 자신이 사회의 방해를 받는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토지보

상문제를 과거 방화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는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토지보상문제는 과거 방화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는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토지보상문제는 과거 방화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는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상문제를 과거 방화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는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토지보상문제는 과거 방화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는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지방대 등록금 1천만원 시대 우려 크다

대학가의 등록금 갈등이 또 시작됐다. 인상안은 가파르다. 상당수 국·공립 대학은 이례적으로 두 자릿수 인상을 제시했고 사립대학도 물가상승률의 2배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았다. 각 대학 총학생회 등은 3월 개학에 맞춰 반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일부 사립대 의학계열 등의 신입생 등록금은 연간 1천만원대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올해 7% 인상을 내놓은 조선대 치의학계열도 1천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지방대 등록금도 1천만원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대학들은 지난 2003년 등록금 자율화 이후 연례행사처럼 등록금을 인상해왔다. 그 결과 교재비와 용돈 등 대학살 1명당 연간 교육비가 1천500만원을 달고 있다. 서민가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학자금 대출리

마져 올라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학 등록금이 늘어난 이유가 없는 것은 아

니다. 사립대는 정부의 보조금이 미미한 현실에서 열악한 재정을 충당하려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대는 법인화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등록금 인상에 더 적극적이다. 이런 추세라면 사립대 수준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라 보인다.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의 질과 장학혜택, 복지수준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학벌까지 세습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마당에 서민 자녀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 없어야 한다. 대학들은 기부금과 재단 전입금 확대, 수익구조의 다변화 등을 통해 재정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하기 바란다. 대안 없이 등록금만 해마다 올려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無等鼓

'사농공상'의 전통적 위계질서가 뿌리 깊은 정치권에 요즘 전·현직 CEO(최고경영인)들의 '4·9총선' 출마선언이 줄을 잇는다. 특히 전국 지지율이 다른 당보다 높은 한나라당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CEO 출신인데다 경제살리기 공약과 맞물려 대거 풀리고 있다.

현 국회의원들의 전직이 관·검사, 변호사, 교수 등 이른바 '사(士)' 그룹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반면, '商(商)'이라 할 만한 기업인 출신은 극소수인 점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CEO 출신들은 정계에 진출했다가도 꿈을 접고 금배지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 CEO 출신인 무소속 이계안 의원을

"정치인들은 경제인들이 돈 버는 문제를 너무 가볍고 쉽게 여긴다. 들어와서 보니 더 허더러"고 말한 적이 있다. 기업가 출신 정치인들의 설움을 보여주는 예라 할만하다. 이 의원은 결국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전·현직 CEO들의 출마선언이 잇달으면서 기업가가 '저평가'되던 정치환

경 변화가 관심이다. 대기업 경영자부터 중소기업 사장까지 도전에 나선 이들만도 30여명에 달한다.

기업인들의 이번 출마표 배정은 CEO 대통령의 당선 시 그 자리에 있다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의 정계 진출에 현재의 정치환경은 더없이 좋다. 경제살

리가 화두인데다 '친기업' 정부의 탄생으로 민간 경제 영역 전문가들의 활동 폭이 예전보다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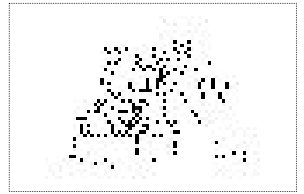
김효연 빙그레그룹 회장이 최근 한나라당에 입당, 선전의 고함인 총남 천안을에서 출마하는 것을 비롯 수많은 기업인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정치입문은 우리나라 경제·정치 발전의 역군이 되겠다는 뜻일 게다. 사사로운 이익(私)을 챙기거나 초심을 잃지 말고 '국가 번영의 큰 그림 그리기'에

일조하길 기대한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CEO의 정계진출



기고

조상열



국보 1호 송레문이 화마에 전소되었다. 국민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밤, 화재 현장이 TV로 생생하게 방영되면서 온 국민의 가슴에 함께 태워버렸다. 상층 지붕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때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역장은 무너졌고, 망연 자살했다.

문화재 지키기 일을 해온 필자로서는 이런 참담함에 울분과 충격, 좌절감마저 느껴진다. 2005년 강원도 낙산사 동종이 불에 타 쫓겨나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 볼 때 내 온몸이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때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중국에는 송레문의 전소가

목적이었다. '송레'라는 글귀는 불과 납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산인 관악산에 맞붙을 높은 격이다. 원래 송레문 주변에 연못을 파서 화기를 제압했으나, 조선 중기 남인의 특세를 시기하던 세력들이 송레문 때문에 남인이 득세하는 것이야 어찌 배워버렸다고 한다.

송레문 복원에 200여 원 정도의 월세와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면면히 배인 흥과 국민의 상처는 복원할 수 없다. 또 목재 80%이상을 교체하는 만큼 600년 넘는 세월을 담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복원하기는 불가능해 국보자격 위상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다. 이제 송레문의 역사적 가치도 국민의

아! 송레문, 이날이 국치일이다

지,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돼야 하는지 한없는 눈물을 아를 가린다.

지난 해 말, 대재앙이라 하는 서해 기름유출사고 역시 10여년 전 남해바다 기름유출 사고의 재연이었다. 낙산사 전소 이후 송레문 전소 반복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무사안일하고 극심한 재해 불감증인가를 확인시켜 주고 있으니 그저 답답할 뿐이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월드뉴스 사고에 고통과 피해는 국민의 몫이고, 외국인을 만나면 한국인임이 부끄러울 때가 많다. 이번 사건도 우왕좌왕하는 관계 당국과 전무한 방재시스템, 총체적 관리부실이 빚은 예견된 인재였다.

송레문은 1398년에 건립되었고, 1447년에 개축을 했으나 원형을 유지해왔다. 세로로 쓰인 '崇禮門'이란 편액글씨는 양녕대군의 필체로 풍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경북궁 앞 관악산이 화산(火山)의 형상이므로 대궐의 화재를 막기 위해 산의 화기(火氣)를 억누르려는

자존심도 이미 한중 잿더미로 변했으니 실로 이날이 국치일이 아닌가?. 방화범 한사람이 송레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죽인 것이다. 특히 서로 내 탓이라며 책임전가 공방만 일삼는 당국과 정치인들이 주범이다. 당국은 610살의 송레문이 숨을 거둔 이날을 문화재사망일과 국치일로 정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처참하게 스러진 송레문을 국장으로 치러서 조의를 표하고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기를 바란다.

이제나마 각 자치단체가 지정 목조건축재에 대해 일제히 재난방지 조사를 벌이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부디 현실적이고 일시적인 행정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교훈과 준엄한 경고를 던져주었다. 이번 일만은 뼈에 새겨 철저히 지속적으로 대비해야만 또 다른 재앙을 면할 것이다.

〈대동문화재단 회장·호남대 겸임교수〉

은펜칼럼

정범도



생태경제학에 '닫힌 계'(close system)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제학은 닫힌 계인 예산 제약(budget constraint)이라는 유한한 사회 속에 놓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의 '재순환 및 축적 그리고 고갈' 구조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환경문제는 우리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닫힌 계 안에 속해 있는 세계의 문제이자 한국의 문제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원인제공자들이 책임있게 배짱을 펴는 상황이다. 전지구적으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은 도쿄의 정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

었다. 그런데 영산강은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며 수집업총량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리고 4대강 중 영산강만 상수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인 서울을 흐르는 한강은 수도권 상수원을 보호한다며 엄청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과 비교하면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호남운하 건설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호남운하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 위해 '그린택스' 도입하자

다. 한국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다.

에너지 사용량은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세를 비롯한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세제는 간접세의 대부분이어서 소득 역진적이다. 또한 산업용 에너지가 가정용 에너지보다 저렴하다.

에너지 관련 세계에서 더욱 큰 문제점은 유류세를 비롯한 에너지 소비세가 대부분 개발 예산으로 사용되면서 환경과 관련 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 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이 대부분 개발예산으로 쓰인다 보니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이제 광주의 문제를 살펴보면,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영산강이 흐르고

는 광주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획기적인 수질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영산강 수량에서 5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광주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개선은 호남운하의 환경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호남운하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영산강 수질개선 사업도 전액 국비로 투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너지 소비세를 그린택스(Green Tax) 개념으로 전환하여 여기에서 조성되는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환경보전에 대한 투자를 100% 하면 된다. 원인제공자들이 더 많이 부담하고 모든 지역에 고른 환경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환경시설공단 상임이사·2006년 7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태권도 체제정비해 '세계 스포츠'로 거듭났으면

요즘 태권도가 올림픽 최종출선에 시달리고 재미가 없다는 등의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지난 2005년 올림픽 무대에서 퇴출 기로에 선 적도 있다. 다행히 태권도는 올림픽에 잔류하기는 했지만 퇴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키는 스승이자 유단자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 태권도의 화려한 기술은 사라져가고, 어떤 것이 점수고 누가 이겼는지조차 불분명한 판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가 사면초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자제점기의 기술 발전이 절실하다. 전자제점기의 개선은 판정의 불공정 시비를 잠재울 수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 겨루기뿐만 아니라 품새의 세계화도 필요하다. 태권도는 단 수련이나 요가처럼 정신 수양에도 깊은 연관이 있으니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지지부진한 태권도공인 조성을 서둘러 중국 소림사처럼 가꾸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성준·광주시 서구 회장

초등학교 우유급식 '건강 음료' 선택권 줘야

내 아이는 유난히 우유를 좋아한다. 단맛을 좋아하는 체질적 특성도 있지만 우유를 마시면 몸이 안맞는지 변비, 설사가 일어나곤 한다. 공리 끝에 우유 대신 두유로 바꿔장기간 마시게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아이의 체질도 개선됐다.

하지만 초등학교 급식에서 우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흰 우유를 싫어하거나 체질적으로 잘 먹지 못하는 아이가 있을텐데 학교에서는 특이체질이 아닌 이상 영양을 생각

안먹는 우유를 집에 들고 오다가 가방 안에서 터지는 상황이 일어난 적도 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우유를 꼭 교실에서 먹으라고 하고 못 먹은 경우 아예 두고 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실제 청소하려고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 책상 위에 두고 간 우유들이 서너 개씩은 있다.

돌아오는 새학기에는 아이들의 식성과 성향을 고려해 무조건 우유를 마시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건강 음료를 나눠줄 수 있으면 한다. ▲유지영·목포시 수강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대표전화 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경영지원국	문화홍보국
222-4918	227-0118	2200-511	2200-541
편집부	문화생활부	광고매케팅	독자서비스
2200-629	2200-628	2200-521	2200-551
정치부	여론제작부	경제	227-9500
2200-616	2200-628	2200-536	02-773-9331
경제부	체육팀	사	02-773-9335
2200-617	2200-627	2200-536	02-773-9335
사회1부	사	2200-617	02-773-9335
2200-628	2200-690	2200-617	02-773-9335
사회2부	2200-570	2200-617	02-773-9335
222-4172	2200-570	2200-617	02-773-9335
*주요목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